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와 방위산업★

김종열*

요 약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Abolition of the Japan's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and Defense Industry

Kim, Jong Ryul*

ABSTRACT

Japan has abolished the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and announced the new 3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of the abolition of the old regulation on banning arms exports. Japan government repealed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to develop military industry and they insist that they pursue their national strategy called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future changes in defense industry due to the new principles are examined with the analysis of the defense industry indicators. The home production of the arms could be continued. Howev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the weapon systems would be increased with not only the US but also the various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efforts to export arms overseas are anticipated to be enha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fense companies.

Key words :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3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Japanese Defense Industry.

접수일(2014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2014년 10월 15일)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1. 서론

지난 7월 초 한국을 첫 국민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최근 일본 우경화에 대한 주변국 반응의 단면이다. 일본은 헌법 개정 논의와 헌법해석 변경 뿐 만 아니라, 평화헌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갖가지 군사력의 보유 및 건설과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하기도 하고 폐지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로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하나로 2014년 4월 1일 아베 정권은 40여 년 동안 존속하여 오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여 일본 무기의 해외수출에 대한 정책도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기존의 무기수출 금지 규정의 족쇄를 풀어 버린 것이다. 주변국가의 우려와 긴장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행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달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환영하고 있다.^[1]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는 일본 방위산업체가 수년 동안 정부에 건의하여 오던 것이다. 일본 방위산업체는 새로운 기회로 반기는 모습이다. 국제공동개발 협력력이나 방산 물자와 무기의 수출에 커다란 장애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이다. 국내 자위대의 수요만을 충족하는 소규모 무기생산은 고비용 발생으로 일본 방위산업을 침체시켰고, 국제적으로는 고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국내 경제의 침체와 아베 내각 이전의 국방 예산 감소로 국내 무기조달 수량의 감소를 가져 왔다. 또한 해외 무기 수출과 국제 방산 협력의 제한으로 일본 방위산업은 경영 위기감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일본 방위산업에 무기수출 금지 규정의 폐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롭게 발표한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둘째, 무기수출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규명하며, 셋째, 이러한 무기수출 금지규정의 폐지가 장차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예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와 권위 있는 연구소가 제시하는 통계 수치를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

2.1 무기수출 3원칙 개정 과정

1967년 4월 당시의 사토 수상은 1) 공산권 국가, 2)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국가, 3)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들에 대하여 일본에서 생산된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본의 평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로 소위 '무기수출 3원칙'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2] 이후 1976년 미키 수상은 위의 3원칙 대상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무기 수출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무기제조 관련설비의 수출도 무기 수출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정책을 추가하게 되어 무기수출 금지를 더욱 강화한다. 이로써 일본은 사실상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정부 정책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무기수출 금지정책은 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을 가로막는 규정으로 작용하여 왔다.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내의 수요만으로는 일본 방위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공동개발이나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첨단 무기개발 시에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상승하고, 선진 국방과학기술의 습득도 어려워 졌다.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은 이른바 '예외조항'을 인정하여 적용하면서, 전면적인 무기 수출 금지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중국의 부상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카소네 정권은 미국의 요청과 미일 안보체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결정한다. 이후 미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칙이 완화되어 적용되었고, 미국이 추진하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일본의 관련 국방기술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 까지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거래의 금지

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3]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개정 요구는 일본 방산업체와 우익 단체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일본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돌파구를 찾는 일환으로 무기 수출금지 해제를 요구하게 된다. 1995년 일본 경단련 방위생산위원회회의 요망서, 2000년 경단련의 제언, 2004년 경단련의 의견서, 2009년 경단련의 방위산업계를 대표한 제언 등에서 대외적인 선진 기업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 일본 군수산업의 국제적인 고립상태 해소, 무기 수출 3원칙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사안별로 예외 조치를 두어 조금씩 완화조치를 취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예외조치, 자위대의 이라크 해외 활동에 따른 예외조치 등이다.^[4]

2011년 노다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발표한다. “방위장비품 등의 해외이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담화의 핵심은 미국 이외의 국가와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가능하게 한 점과, 평화공헌과 국제 안보협력의 명분만 있으면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무기기술의 공여와 무기의 공동개발 생산을 예외적인 조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하에 일괄하여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일본과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방위장비에 대한 국제공동개발 생산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기까지 무기수출 3원칙은 유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급기야 2014년 아베 내각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게 된다.

2.2 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년 4월 1일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대하여 각의 결정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도 발표한다. 수십 년 동안 무기의 해외 수출 길을 막고 있던 규정인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무기의 해외수출을 인정하는 대 전환을 가져 왔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주변국은 경계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발표되기 바로 이전인 2013년 12월 17일, 일본 정부는 통상 10년 주기로 발표해 오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국가방위대강(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을 3년 만에 새롭게 발표한다. 이번 국가방위대강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의 역할이 일본이 처한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방위 장비와 기술의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무기 장비의 기술 이전과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위 개념의 국가안보 지침서에서 이미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이나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위장비와 기술, 무기 생산 관련시설 등의 해외 이전에 대한 통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것이다.^[5] 첫째, 해외 이전이 금지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가)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에 위반될 경우,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의무를 위반 할 경우, 다) 유엔 안보리에 의해 평화유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국가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둘째, 해외로의 방위 장비와 기술의 이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에 의한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 평화공헌,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경우, 나)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안보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국제 공동 개발·생산, 다) 동맹국들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강화, 정비를 포함한 자위대의 해외 활동 지원, 그리고 일본인의 안전 확보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이다. 셋째, 목적 이외의 사용과 제3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가) 평화공헌, 국제협력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나) 부품 등을 공동 사용하는 국제적 시스템에 참여할 때, 다) 부품 등을 라이선스 제공국에 납품할 때에는 이전지역에서의 통제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에는 해외로의 방위 장비와 기술의 이전이 허용 되는 몇 가지를 좀 더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6] 예를 들면, 물품과 서비스의 상호제공협정에 입각한 방위장비의 이전, 미국과 상호 기술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방위기술 공여, 미국의 라이선스를 얻어 생산한 부품이나 서비스 제공, 미국 이외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협력과 관련된 것들은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 관점에서 방

위장비와 기술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위장비 이전을 위한 엄격한 사전심사, 이전된 지역과 국가에서의 적절한 통제시스템 확보, 이전 절차, 이전에 따른 보고 및 정보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2.3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함의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 용어에서 ‘3원칙’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기존의 방침인 무기수출 금지를 계속 시행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다. 그래서 신(新) 무기수출 3원칙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무기 수출의 금지는 사실상 완전히 해제되고, 일본이 추구하는 보통국가처럼 무기 수출을 다른 여타 국가와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무기와 방산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수출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7]

일본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다양한 방위 장비와 기술의 해외 수출과 국제 방산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방위장비 기술은 대부분 민간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서, 민간 방산업체들도 무기 장비의 해외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던 미국과의 국제 공동개발이 더 확대되고, 여기서 생산된 구성품이나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외의 국가와도 국제 공동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 개발된 구성품과 장비의 수출을 시도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일본이 경쟁대상자로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양국 간의 관계가 원활해 질 경우에 한일 방산 협력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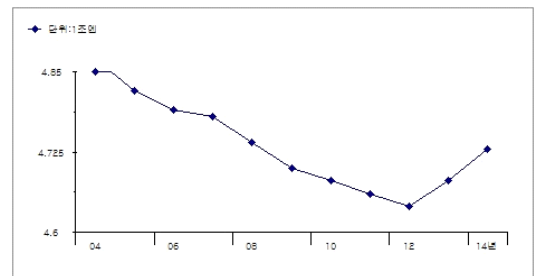
3. 일본 방위산업의 주요 지표

일본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고 일본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무기 수출 금지의 해제가 일본 방위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을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고립된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로 경제적 이익 창출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연관이 있는 일본 방위산업의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국방비 규모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이 소요되는 무기와 장비의 구매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며 국방비의 규모를 통하여 방산분야의 예산 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1) 일본 국방비 규모의 변화 추세^[8]

아베 내각의 우경화에 따른 국방비의 증가추세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국방비 4.8조 엔은 세계 6위에 해당되며, 이 중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소위 ‘일반물자’ 비용은 약 2.9조 엔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기지운영, 정비, 무기장비 획득,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국방비의 대부분을 인력 유지보다는 장비 관련 비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병력 1인 당 국방비의 규모가 월등히 높은 수치에서도 무기장비 위주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병력 1인 당 국방비가 약 3만 달러 수준이지만, 일본은 20만 달러 수준으로 거의 10배 수준이다.^[9]

3.2 국방 연구개발비와 국방과학기술 수준

일본의 국방비 전체규모가 증가하는데 따른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연구개발비의 증가 추세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10] 전체 국방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수준으로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1%, 영국과 독일은 3% 수준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

간 꾸준히 국방 연구개발비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1> 국방 연구개발비 규모(단위 1억 엔)^[11]

'09	'10	'11	'12	'13	'14
888	1,004	1,017	1,027	1,309	1,346

그리고 한국의 국방기술품질원이 조사한 2012년도 일본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세계 6위로 발표하고 있다.^[12] 미국의 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84로 선진권에 속하고 있다. 권혁기는 일본 방위산업 경쟁력 분석에서 일본의 해상, 전투기, 미사일 관련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13]

3.3 무기수출 규모

일본의 무기 수출은 미국과의 제한적인 공동개발 외에는 금지되어 왔으므로,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된 무기수출 실적은 2004년도에 1회의 수출 외에는 기록이 없고 세계 45위로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2000년대 세계 50대 무기 수출 국가에 일본은 명단에도 없다.^[14] 일본 방산업계가 무기수출 3원칙의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를 알 수 있다.

<표2> 주요 국가의 무기 수출규모 비교
(단위 SIPRI TIV, 100만달러, 1990년 불변가)^[15]

주요국가	07-11년	순위
미 국	39,133	1
러시아	30,517	2
독 일	11,794	3
중 국	4,756	11
한 국	2,174	15
일 본	40	45

3.4 주요 방산업체의 생산 실적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매년 세계 100대 무기생산 업체를 무기 생산 판매액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2년도에 일본의 방산업체는 계약실적 통계를 기준으로 6개 업체가 세계 100대 기업에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한국항공(67위) 등 3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일본의 주요 방산업체는 순수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방위산업체의 방산생산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데, 무기 수출 금지 정책에 의한 방산 물자의 수출 차단이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표3>일본의 세계 100대 방산업체^[16]

순위	업체명	방산매출 (억불)	전체매출 (억불)	방산 비중 %
29	미쓰미시 중공업	30.1	353	9
45	NEC	20.5	385	5
51	가와사키 중공업	18.6	162	11
54	미쓰비시 전기	15.5	447	3
55	DSN	15.3	-	-
76	IHI그룹	9	175	5

반면에 일본 100대 방산업체의 전체 매출액 규모를 보면 <표4>에서 처럼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작은 수출 규모에 비하여 내수용 방산 매출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4> 각 국가 방산 매출액^[17]
(2009년도 100대 기업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2006-2009)
1	미국	246,690	9.7%
2	영국	50,260	11.9%
6	독일	7,630	8.5%
8	일본	6,640	8.3%
13	한국	1,920	6.2%

3.5 방위산업 전업도

일본의 방위산업 연간 총규모는 2010년 기준 1조 6,700억 엔 수준으로 이는 일본 전체 제조업의 약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18] 또한 일본 방위산업이 국내 자위대 수요에만 의존하고 있는 체제이다. 대부분의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민수시장에 더 활발하게 진출하여 있고, 자연스럽게 주요 방산업체의 방산전업도는 매우 낮아 2014년도에는 평균 4.9%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다.^[19] 매출액이 많은 대기업들의 방산전업도는 2-3%에 불과하여 무기 장비의 개발과 생산의 기반을 유지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도 일본 국

방백서에서도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방산업체가 없고, 대부분의 방산기업이 낮은 방산전업도의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첨단 방위산업과 기술의 기반이 민간 소유이므로, 이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방산업체는 이러한 낮은 전업도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수출을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 분석한 주요 지표들을 보면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첫째, 일본 국방비의 증가 추세다. 둘째, 그러한 국방비가 무기장비의 획득과 유지에 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방 연구개발비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첫째, 방산매출액이 국내 수요에만 의존하고 있고, 둘째, 기업들의 방산전업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셋째, 무기 장비의 해외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지표들은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일본의 방위산업 전망

4.1 무기 국산화 정책 유지

전후 방위산업의 육성을 시작하면서 일본은 전통적인 국산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성 내부 조직으로 국방획득과 관련된 조직은 방위정책국, 경리장비국, 장비시설본부, 기술연구본부가 있다. 방위산업과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책 수립과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는 방위정책국과 경리장비국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 조직 기관의 무기체계 조달방식을 보면 국내조달과 해외조달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 국내조달은 2조 2천억 엔 규모로 전체 조달계약금액인 2조 4천억 엔 규모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위성에서 조달하는 무기 장비의 90% 이상이 국내조달로 획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국산화를 통한 적극적인 내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방위성 획득 장비의 90%이상을 '내부화'하고 있다.^[20]

일본은 전후 무기생산체제의 주요 부분을 미국기술에 의존하여 왔으나, 방위력정비계획이 진전됨에 따라 무기 국산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무기의 해외구매를 피하고 면허 생산을 통한 국내생산 또는 국내개발에 중점을 두어 1970년대부터 국내조달 비율을 높여 왔으며, 해외 수입은 겨우 6%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당시 나카소네 방위성 장관의 방위장비 개발 생산에 관한 5가지 원칙이 제시되면서 국내 무기개발의 정책이 공고하게 되어 지금까지에 이르고 있다. 당시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의 주요 요소로서 일본의 방위 산업기반을 유지한다. 둘째, 일본 국내의 연구 개발과 생산으로 장비를 확보한다. 셋째, 국내 무기생산을 위해 민간산업체를 이용한다. 넷째, 무기 연구 개발과 생산의 장기 목표를 설정한다. 다섯째, 방위 생산에 경쟁원칙을 도입한다.^[21]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약 1,600기 정도인데, 일본이 국내에서 생산한 항공기가 1,450대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항공기를 국내조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무기 국산화 정책은 세계에서 유일무이 하다고 할 수 있다.

<표5> 주요 국가의 무기 수입규모 비교
(단위 SIPRI TIV^[22], 100만달러, 1990년 불변가)^[23]

주요국가	07-11년	순위
인도	12,650	1
한국	7,093	2
중국	6,325	4
미국	4,473	8
영국	2,800	13
일본	2,174	20

무기 수입규모를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해 볼 경우, 일본의 무기수입 규모가 매우 작음을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수요만을 위한 내수 전용의 방위산업이 향후에는 내수와 수출 겸용의 구조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화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국산화와 국제 공동개발 형태를 병행하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방산업체들이 무기수출 3원칙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추구하여 온 방향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 하에서 국내 국산화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방산기업들은 활발하게 수출의 활로를 찾아 국가 경제적 이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의 무기 국산화정책은 무기 장비와 기술의 해외 수출 시에 일본 방산업체에게 더 많은 이익 창출의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국제 방산협력에 의한 수출 확대

무기 개발 생산의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정비 능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기반과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앞에서 언급한 무기 국산화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F-35 전투기 사업을 통하여 국제 방산 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국의 F-35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자국의 방산업체가 얼마만큼 참가 가능한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2012년도 일본 방위백서에는 F-35의 결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24] 주요 기종 평가 요소로서 성능과 비용 외에 일본 방산업체가 생산과 정비에 참여하는 정도가 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방산업체의 참여는 전투기 운영 간에 직접적이고 즉응적인 정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전투기 관련 기술 데이터의 이전을 통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국내 개발된 무기의 장착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도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F-35 차기 전투기 사업에 일본 방산업체의 참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25] 일본은 42대의 F-35를 구매함에 있어서 일본의 전투기 산업기술 기반을 유지발전 시키고 수준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구성품을 제작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본제 구성품은 약 3,000대의 F-35 총 예정 생산량에 사용되고, 후속 정비 시에도 공급된다. 엔진 구성품과 레이더 구성품 등의 일본제 구성품은 F-35전투기 총 부품물량의 40% 수준까지 예상하고 있다. 자위대 납품 물량에 대해서는 최종조립과 조립시험까지 일본 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와 같은 무기 구성품의 공급은 F-35가 사용될 국가에 무기 수출이 되는 것과 같다. F-35사업과 같은 국제협력 사업은 2013년도 당시의 무기 수출 3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F-35사업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고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미국-일본의 효과적인 안보협력에 기여하고, 국제 평화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국제 방산협력에 의한 공동개발과 생산은 확대되어 갈 것이다. 국제 공동개발을 무기와 기술의 수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향은 무기수출 3원칙이 폐지 발표가 된 직후 곧바로 언론에 공개된 다음과 같은 국제방산협력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14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에게 방공 미사일의 센서 부품을 미국 레이시온사에게 수출 허락하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히고 있다.^[26]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사용되는 추적 장치로 알려졌다. 처음으로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의하여 허용된 수출 사례이다. 이어서 영국과는 공대공 미사일의 공동개발을 허락하였고, 호주와는 호주 총리와 아베 수상이 양국의 잠수함 공동개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프랑스와 일본 양국의 국방장관은 2014년 7월 말 양국의 무기 개발과 생산 협력 문서에 서명하고, 무인 잠수정 등의 공동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27]

4.3 미·일 방산협력 우선정책의 지속

일본 방위정책에서 하나의 큰 축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다. 중국부상과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아가고, 여러 분야에서 미일 협력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2013년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일본방위대강에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천명하고 있다.^{[28][29]}

미일 방산협력에 있어서 양국은 자국이 추구 하는 바는 약간 상이한 면은 있다. 미국은 일본의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고, 반면에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강화 수단뿐만 아니라 무기 구성품과 기술의 수출 통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타산에 발맞추어 민간 업체 위주의 ‘미일 기술포럼’이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을 수년간 이끌어 왔으며, 무기수출 금지의 예외 조치로서 미국과의 방산협력에 의한 수출이 용인되었다.^[30]

무기수출 금지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미일 방산분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미일 간의 방산 협력은 공동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향후에는 더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6> 미일 주요 공동 연구개발 사업^[31]

분 야	연구개발 내용	기 간
강철연구	잠수함용 초강도 강철	1995-2002
레이다	안구보호용 레이저 레이 다(LIDAR)	1996-2001
추진제	고체와 액체 혼합연료에 의한 추진제	1998-2005
탄도미사일	해군용 탄도미사일 시스 템	1999-2008
항법기기	P-3C 후속기의 탑재 전 자기기	2002-2006
무전기	소프트웨어 무전기	2002-2007
전함레이더	위상배열 레이더	2006-2009
미사일	대 탄도 요격미사일	2006-현재
탐지제	휴대용 화학탐지 장치	2008-2013
GPS	현 GPS 개선 기술	2010-현재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	2010-현재

4.4 방산 수출 정책의 가속화

일본 정부가 무기의 수출 장려 정책을 천명하지는 않지만 정보보다는 민간 기업이 앞서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무기 수출의 장애 규정인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여 무기 수출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산업체가 활발하게 국제 방산협력과 무기 수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4년 6월, 프랑스 유로 사토리(Euro-Satory) 무기전시회에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비롯하여 12개 회사가 처음으로 참여하였다.^[32] 2014년 7월, 영국 판버러(Farnborough) 무기전시회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위시하여 일본의 방위산업체가 과거와는 달리 대거 참여하였다.^[33] 일본 방산업체가 새로운 무기 수출 판로의 개척과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현재 서로 분리 운영되어 오던 무기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약칭 ‘방위장비청’으로 개편할 계획이다.^[34] 한국의 방위사업청이나 프랑스의 병기본부와 유사한 조직으로 보인다. 약 2,000명 수준의 인원으로 무기획득, 방산협력, 무기 수출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더욱 무기 수출에 대한 가속화 정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망은 이미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일본 방위성은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전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방산분야에는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정의 관련 업체수는 약 2,500개 정도이다. 이런 방만한 방위산업의 진흥 방향으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과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35] 이시다는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으로 과거의 무기수출 3원칙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국산화 일본도에서 벗어나 국제 방산협력과 수출이 일본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36]

5. 결 론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라는 새로운 무기수출 규정을 발표하였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무기수출 금지 규정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일본의 방산업체가 무기와 기술의 해외 수출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길을 터놓은 셈이다. 이러한 무기수출 정책에 대한 대변환을 가져온 배경과 이유를 분석하였다.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과정과 일본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본 결과, 아베 정부의 국가 방위전략의 하나인 적극적 평화주의 추구하고 일본 방산업체가 수년 간 주장하여 온 무기 수출금지 규정의 폐지 요구가 맞물려서 발현된 현상이다.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보면, 국방비의 증가 추세와 국방과학기술의 비교적 높은 수준 등의 긍정적인 요소와 국내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와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그리고 국제적 고립화로 인한 방산 수출의 저조 등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는 일본 방위산업이 장기간에 걸쳐 겪어온 부정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에 따라 일본 방위산업은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산화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국제 방산협력 사업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일 국제 방산협력의 폭을 우선적으로 더 넓혀갈 것이며, 타 국가와도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하여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무기와 방산 기술의 해외 수출도 새로운 정부 조직과 정책의 지원 하에 방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규정의 폐기와 국제 방산협력 증대, 무기수출 지향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할 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본다. 향후 한일 간의 방산협력은 양국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 [1] 동아일보, “日 무기수출에 박수치는 美… 대가 치를 것, 격양하는 中”, 2014.4.4.
- [2] 일본 방위성, “Three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1쪽, 2014.
- [3] 박영준,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안보정책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4집, 6-8쪽, 2012.
- [4] 김진기, “탈냉전 이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56권 제4호, 58-65쪽, 2013.
- [5] 일본 방위성, “Three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2-3쪽, 2014.
- [6] 일본 방위성,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the Three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2014.
- [7] 장혜진, “일본의 새로운 무기수출원칙: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도입의 배경과 안보적 함의”, 동북아안보정세, KIDA, 2014.
- [8] 일본 방위성,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FY 2014”, 48쪽, 2014.
- [9]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Asisan Defense Spending 2000-2011”, 5쪽, 2012.
- [10] 일본 방위성, “Defense of Japan 2014”, 00쪽, 2014.
- [11] 일본 방위성,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FY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12] 국방기술품질원,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11-13쪽, 2012.
- [13] 권혁기, “일본 방위산업 경쟁력 분석”, 일본연구 제 20집, 183-185쪽, 2013.
- [1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Yearbook 2013』, 248쪽, 2013.
- [15] 국방기술품질연구원, 『2012 세계방산시장연감』, 42쪽, 2012.
- [16]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Fact Sheet,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2012”, 3-4쪽, 2014.
- [17] 안영수 외, 『방위사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경쟁력 평가』, 118쪽, 산업연구원, 2011.
- [18] 김창모 외, “일본이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4, 36쪽, 2014.
- [19] 일본 방위성, “Defense of Japan 2014”, Fig. 4-1-1-1, 2014.
- [20] 김창모 외, “일본이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4, 28-29쪽, 2014.
- [21] 김진기, 『일본의 방위산업: 전후의 발전체적과정 정책결정』, 아연출판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51-155쪽, 2012.
- [2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제안한 하나의 단위인 TIV(Trends Indicator Value)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다. 국가 간 무기거래 시에 공개되는 판매 금액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하기 위해 창안된 단위이다.
- [23] 국방기술품질원, 『2012 세계방산시장연감』, 42쪽, 2012.
- [24] 일본 방위성, “Defense of Japan 2012”, 151-156쪽, 2012.
- [25] 일본 방위성, “Defense of Japan 2013”, 278-280쪽, 2013.
- [26] 월스트리트저널, <http://online.wsj.com/articles/japans-military-contractors-make-push-in-weapons-exports-1405879822> (검색일 : 2014. 8. 30)
- [27]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kyodo-news-international/140729/japan-france-strengthen-cooperation-defense-equipment-> (검색일: 2014. 9. 1)

- [28] 일본 방위성,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3”, 2013.
- [29] 일본 방위성,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4 and Beyond”, 2013.
- [30] 김진기, 『일본의 방위산업: 전후의 발전체적과정 정책결정』, 아연출판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70-393쪽, 2012.
- [31] 일본 방위성, “Defense of Japan 2013”, 337쪽, 2013.
- [32] 제팬타임즈, <http://www.japantimes.co.jp/news/2014/06/16/national/japanese-companies-debut-international-defense-fair/> (검색일: 2014. 9. 3)
- [33] 제인스, <http://www.janes.com/article/40757/farnborough-2014-japanese-firms-take-baby-steps-towards-export-market> (검색일: 2014. 9. 5)
- [34]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0411053916530> (검색일: 2014. 9. 4)
- [35]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경제동향(Japan Weekly Economic Digest), 3-4쪽, 2013.
- [36] Ryota Ishida, “An Analy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at Impact Sustainment of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Naval Postgraduate School Thesis, 51-54쪽, 2002.

[저 자 소 개]



김 종 열 (Kim, Jong Ryul)

1980년 3월 학사
1989년 12월 무기체계공학 석사
1996년 5월 재료공학 박사
2011~현재 영남대 군사학과
부교수

email : jrkim1201@yu.ac.kr